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순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27
----------	------

발의년월일 : 2021. 3. 5.

발 의 의 원 : 황순자 의원
강성환 의원
김원규 의원
김태원 의원
배지숙 의원
송영헌 의원
안경은 의원
이만규 의원
이영애 의원
임태상 의원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되었으나, 선분양 후입주의 공급방식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분양신청과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입주 전 현장 확인과정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이 공사품질을 확인하기 힘들며, 특히, 조정시설이나 주차장, 진출입로 등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입주 이후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이에 따라 그 동안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의 개정예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며, 아울러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위원 구성과 임기 및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항, 소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품질점검단의 운영을 도모함.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
- 나. 공동주택 개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점검에 있어 동별 2세대 이상,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을 점검하되, 대상 세대는 현장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여 면밀하고 투명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함. (안 제5조)
- 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품질점검 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의 공이 큰 시공사, 감리자,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명시하여, 품질점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 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설치 기준 관련 조항을 간략하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운영과 이해의 편의를 도모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 협의완료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3에 따라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시공여부의 확인 등 품질의 점검을 위해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①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품질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효율적인 점검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소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점검대상 단지의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분하여 구성하며, 한 명의 위원이 복수의 소위원회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4조(품질점검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3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품질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스스로 사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와 품질점검단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질점검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유부분의 점검) ①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은 동별 2세대 이상,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으로 하며, 품질점검단이 현장에서 선정 하는 세대로 한다.

- ② 영 제53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전유부분의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세대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장은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품질 점검위원에게 업무에 따른 수당 또는 여비 등(이하 “수당 등”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 영, 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이고 철저한 품질점검단의 운영과 품질점검업무의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이 우수한 단지의 시공·감리자나 업체, 품질점검 업무에 이바지한 공이 큰 위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시공단지에 대한 인증마크 등을 줄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받은 업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 알릴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위원은 품질점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소장 도서는 전체의 면적과 장서의 1/3이상으로 한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바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소장도서가 2,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도서를 각각 22제곱미터 이상, 670권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단지의 특성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품질점검단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 또한 이와 같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 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품질점검단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사업주체등이 법인·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행정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 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 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3.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제53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하자를 말한다.

⑤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53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하여 제53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⑦ 법 제48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공동주택이 영 제53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의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단이 영 제53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품질점검단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시·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건설문화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점검 등의 검수(이하 “검수”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검수자문 대상 및 범위) ① 위원회의 검수자문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장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로 한다.

1. 시가 승인한 주택건설사업장 중 구청장·군수가 품질점검을 요청하는 공동주택 단지
2.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품질점검을 요청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단지

3. 그 밖에 시장이 분쟁, 부실시공 등이 발생한 단지를 비롯해 품질관리를 위해 검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단지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1. 건축물의 구조 및 내·외장재, 창호 및 방화문, 냉·난방시설, 조정시설, 주차장, 안전 및 범죄예방시설, 재난 및 재해 예방시설 등 공동주택 단지 전반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건설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결함과 하자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시정방안 및 시정 이행여부의 확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4.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품질의 확보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계획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양계약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검수자문 시기) ① 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공사의 공정률이 95%에 도달한 때에 검수자문을 실시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시공자와 미리 협의하여 공정률에 따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품질에 문제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확인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면, 제1항에서 정한 공정률 이전에도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수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소위원회) ① 효율적인 자문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소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문대상 단지의 규모나 특성,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한 위원이 중복해서 다른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나이,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 조경, 토목, 경관, 안전 등 공동주택 건설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건축, 토목, 조경분야의 5급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4. 구청장·군수,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대표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건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회의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을 비롯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검수업무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이 우수한 단지의 시공·감리자나 업체, 검수자문 업무에 이바지한 공이 큰 위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시공단지에 대한 인증마크 등을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 받은 업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 알릴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은 검수 자문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